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44
----------	------

발의연월일 : 2020. 7. 31.

발 의 자 : 정진석 · 홍문표 · 정희용
하영제 · 윤두현 · 지성호
최승재 · 김석기 · 김정재
김선교 · 추경호 · 임이자
의원(12인)

제안이유

임업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등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의 의존도가 높은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촌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임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조건불리지

역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업인은 마을 단위로 임업직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건불리지역 임업직접지불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산촌마을의 임업인은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임업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특별자치시장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불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

가하여 정수하여야 함(안 제13조).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 임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임업직접지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생산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건불리지역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임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임업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임업생산성, 정주여건, 산림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임업직불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가 또는 임업인은 제외한다.

1.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는 자는 임가 단위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임가의 임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6조(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임업직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임업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산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등은 사업신청서와 산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한 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촌마을을 선정하여 읍·면·동장과 운영위

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산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업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산촌마을의 임업인은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임업직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임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① 특별자치시장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임업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임업직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산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임업직불금의 지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업직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임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산촌지역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인이 제1항에 따른 임업직불금의 지급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업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임업직불금의 지급요건·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산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임업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고) 특별자치시장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업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업직불금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자료의 제공요청)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환수 및 가산금) ① 특별자치시장등은 임업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업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임업직불금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 특별자치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제2항에 따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특별자치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직불금을 수령한 자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도 거짓으로 임산물판매 또는 임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